

盧대통령 “여수박람회 유치” 천명

향후 과제와 전망

# 인프라 확충·외교력 강화 급선무

### 정·재계 전력투구 전방위 유치노력 본격화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에 대한 정부의 '전력투구'를 선언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의지 확인에 따라 지난 2004년 12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추진돼 온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의 실패를 딛고 2012여수박람회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유치노력 본격화=2012여수박람회 유치 성사를 위해 가장 강조돼 온 것은 정부의 확고한 개최의지였다. 개최 후보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BIE 회원국을 상대로한 외교활동 등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확고한 유치 의지가 절실한 터에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은 유치 활동에 매우 고무적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대하는 국내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날 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당연시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급=2002년 당시 2010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프라 부족이었다.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2012박람회 유치 성사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하다.

2007년 말로 예정된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개최 후보지 실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여수시 주상동~순천시 해룡면의 국도 17호선 7.2km 확포장공사 중 여수공항과 박람회장 구간 우선 완공이 절실하다. 개최 후보지인 여수 진입로인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 확장도 시급하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49km)는 공정률 9%에 머물러 있고 여수~광양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공사(8.5km)는 발주단계다.

숙박시설도 크게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해 9

2004. 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국가계획 확정
2006. 5	해수부, 건교부에 여수 엑스포 일정 도시개발 지구지정 승인 신청
2006. 5	중앙유치위원회 창립
2006. 5. 22	한국 유치신청서 제출
2006. 6. 28	모로코,튀니지 유치신청
2006. 11	유치경쟁국 확정
2007. 3	세계박람회 사무국 설치
2007. 12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월 한국을 방문했던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여수에 특급호텔 하나라도 있느냐”고 물었을 정도로 열악한 기반시설이 박람회 유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만 (주)일상이 화양지구 내에 오는 2007년 완공 예정으로 관광호텔(256실) 등을 짓는 오션리조트 개발공사를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주) 여수관광레저도 관광호텔(52실)을 포함한 시티파크리조트를 2007년까지 조성기로 했다.

◇외교력 강화=2002년의 중요한 실패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외교력'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대회는 세계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 위원이 개인별로 투표하지만 세계박람회는 정부 대표가 개최국 결정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시 재계를 활용했던 우리나라에 대응해 중국은 상하이 진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이클럽'을 구성해 우호세력을 형성하고, 해외에 진출한 '화상(華商)'을 활용해 유치활동을 보완함으로써 2010박람회 개최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2012 여수엑스포 개최성사를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견지하고 후보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을 최대한 빨리 확충함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외교력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각종 화물차와 승용차로 정체를 빚고 있는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시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확장공사가 시급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비리검사·판사 파면·해임”

### 법조비리 후속대책...당정, 징계법 개정기로 비위 수사대상 판검사 사표 수리 보류도 추진

법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민·형사 사건을 일일이 보고받아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여당도 당정협의를 열고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등을 개정, 비리 검사에 대해선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판사에 대해서도 비리혐의가 확인될 경우 비리 검사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법사위원 회의를 별도로 열고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의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

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중요사건의 보고와 배당·처리, 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일부 재판예규를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라 대법원에 보고해야 할 '중요 사건'을 '국회의원·국무위원·정부위원·법원공

무원(법관 포함)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예규는 법원공무원 조문을 '전·현직 법원공무원'으로 바꿨다. 하지만 보고 의무 강화조치만으로 법조비리 근절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18일 오전 국회

에서 협의회를 열어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등을 개정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검찰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했던 검사·법관 징계위원회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 법원장이 지닌 징계요구권을 검찰·법원 내 감찰·윤리위원회에 부여 ▲급전수수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비위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추진기로 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가 1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병적에 왜 중졸로 기재됐나” “두 딸 외교 편입 문제 없어”

국회 교육위는 18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코드 인사, 자녀의 외교 전·편입 문제 및 병적 기록 오류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가 두 딸을 모두 외교에 편입시켰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의 학생모집 지역 제한을 우회 비판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해병성 집의'를 통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교평준화 등 기존의 교육정책의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학법 개정에도 반대했다.

◇교육정책=고교평준화, 3월(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정책, 외국어고 지원 지역제한, 교장 초빙 공모제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 지역 제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선택권과 교육감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코드 인사 논란=교육비전문가로서 코드인사의 전형이다. 고교평준화 문제=평준화로 학력 하락 평준화, 교육의 다양성 저하

외국어고 지역 제한=수월성 교육 약화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자녀 외교편입 논란=두 자녀 외교 전·편입학이 특혜 아닌가

병적기록 오류 논란=병적기록부 상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대상인데 방위로 근무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이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보통교육 경력이 없다'고 실향했다"며 교육 관련 비전문가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행정가나 교육학자 출신만 교육부총리에 적합하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일축했다.

◇자녀 외교 진학=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차녀는 지난 2002년 서울의 한 여고에 입학했으나 이틀만에 외교로 편입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 “외고 지역 제한 재검토 하라” “평준화 폐지엔 교육 양극화”

#### ■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쟁점

쟁점	질 의	서면 및 실제 답변
코드 인사 논란	교육비전문가로서 코드인사의 전형이다	코드 인사 아니다. 오히려 적임자다
고교평준화 문제	평준화로 학력 하락 평준화, 교육의 다양성 저하	폐지할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 초래,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평준화 틀 내에서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 추진하겠다
외국어고 지역 제한	수월성 교육 약화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시행해야 하지만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자녀 외교편입 논란	두 자녀 외교 전·편입학이 특혜 아닌가	절차상 문제 없다
병적기록 오류 논란	병적기록부 상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대상인데 방위로 근무했다	병적기록부 작성은 모르는 일이다. 아열대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은 등 병역특례는 없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두 딸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입학시켰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병적기록 오류=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가 정상적인 양식이 아닌데다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군부 대상인 3등급인데 방위병 군부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고 다리에도 수술자국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5기 35형 540세대

3기 28형 1,792세대

문의전화 | 062-368-8322

전·세·조·경·시·행

5기 35형 540세대

3기 28형 1,792세대

문의전화 | 062-368-8322